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오늘의 위기를 읽지 못했는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1. 들어가는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국가가 부도위기로 몰리게 되자 “그동안 경제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왜 이러한 위기를 진작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되었다. 이제 각 언론들은 오직 외신보도나 외국의 저명학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만을 인용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경제학자나 정부연구소 및 지식계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고 소리 높여 비판하였다. 물론 한국 경제에 대해 쓴소리 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고 과소비를 부추겨 온 보수언론이 오늘의 IMF ‘사태’에 훨씬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자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환위기와 IMF ‘사태’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경제학자들만은 아니었다.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이후 한국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 같은 사람도 그 직전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 지극히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조선일보》 1997년 1월 12일자 대담을 보면 그는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멕시코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가”라는 기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불구하고 “한국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멕시코보다 훨씬 건실하고 역동적인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 한국의 반도체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 무역적자의 확대는 반도체의 가격하락에 기인한 것이며 일시적인 현상이다. ... 한국 경제의 근간은 건실하다. ... 한국은 향후 20년 동안은 낙관적이다. 미래에도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¹⁾라면서 극히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 주었다. 물론 MIT의 폴 크루그만 교수처럼 동아시아의 양적인 성장의 한계를 지적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 역시 ‘이렇게 급박하게 위기가 닥쳐 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²⁾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이렇듯 사태를 진단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이론을 따르는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경제위기에 대해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외국의 세계적인 한국전문가도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큼도 한국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것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크루그만이 실토하였듯이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의 단기자본을 직접 끌어들이는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질서하에서 전통적인 경제지표상에는 위험신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말 이후 지가상승으로 인한 가공의 자산가치의 증대가 갖는 위험성이나 93년 전후 반도체 호황의 실제 배경, 환율평가절하를 실시하지 않는 데서 초래되는 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경고하지 않았던 주류경제학이나 96년 이후 기업의 이윤율 하락과 외채의 급격한 증대의 현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맑스 경제학, 그리고 사회현상을 경제현상과 결부시켜 파악하지 못했던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진보적인 사회과학자들이 재벌체제를 비판하고 한국 경제의 낙관

1) 《조선일보》 1997년 1월 12일자 기사 참조

2)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위기», 《주간조선》 1998년 2월 19일자 기사 참조

론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경고와 비판은 다소 원론적이었으며, 금융연구원 등 일부 정부연구소나 몇몇 개별 연구자들이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진단하기는 했으나 어떤 연구자도 이 문제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하지는 못했다. 필자의 판단으로 경고신호를 가장 지속적으로 보낸 매체는 《한겨레21》이었다고 생각되는데,³⁾ 우리사회의 어떤 사회과학자도 《한겨레21》만큼의 지적인 성실성과 국가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우리의 무능이 어디서 기인하는가를 살피면서 지식인과 사회과학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2. 신자유주의의 반격과 90년대의 학문정치

주지하다시피 1989년 소련 동구 사회주의 붕괴 당시 서구의 사회과학자, 특히 주류 사회과학자들은 그것을 거의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엄격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자본주의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학문 사회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주장하는 통화주의 경제학자,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의 거센 물결에 정신차릴 틈도 없이 휩쓸려 들어갔다. 따라서 60, 70년대 기간 신좌파나 베버주의적 국가개입론자들에 의해 한동안 위축되어 있었던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유토피아론과 세계화의 가치를 내걸고 전 세계의 학문 사회를 석권하기 시작하였다.

90년 이후 한국의 주류 사회과학계 역시 이러한 기운에 힘입었다. 그것은 80년대 한국의 인식지평을 주도한 사회구성체론과 좌파사회과학에 대한 일대 반격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좌파이론에 대한 우파의 반격은 한편에서는 세계화론, 중진자본주의론과 유교자본주의론,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다른 편에서는 계급이론에 대한 비판과 포스트

3) 《한겨레21》의 1995년에서 96년 사이의 재벌, 외채, 금융 관련 특집들을 참조하라.

맑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담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권 들어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담론이 풍미하면서 이제 지식인들도 세계화와 시장질서 속에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기를 것인가를 주요 쟁점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구 국가에서처럼 신고전파 경제이론과 그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이론 등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개인주의적인 시각이 더욱 발언권을 높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리하여 일각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국가, 노동운동, 빈곤, 통일 등을 이야기하면 아예 “아직도 그것을 논하냐”는 식의 눈총을 주었고, 그러한 담론이 지식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세를 퍼부었다. 그리하여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학자들의 대대적인 변신이 일어났고, 이제 학문에 입문하는 새로운 세대의 학자후보생들은 한국사회의 딱딱한 사실들보다는 문화, 여성, 사상 등 부드러운 주제로 대거 관심을 옮겼다.

단군 이래 최대의 땅투기가 벌어지던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학문 사회에도 본격적으로 거품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거품은 바로 땅투기에서 부자가 된 사람의 심리가 그러하듯이 이제 우리사회가 저임 노동력에 기초한 고도성장기에서 질적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생산중심적인 사회에서 소비중심적인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지식보다는 정보가, 계급(class)보다는 차이(difference)가, 거대담론보다는 미시담론이나 생활의 정치가 중심이며, 노동운동보다는 시민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로 들어섰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확실히 정치적 조건의 변화는 학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의 내용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론까지도 변화시켰다. 그리하여 이제는 “왜 한국사회가 문제인가”를 묻기보다는 “한국이 21세기의 진짜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한국사회가 잘 살게 되었나,” “잘 사는 한국사회에는 무엇이 주된 관심거리인가” 하는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다.

우리가 학문 혹은 학자들의 인식과 실천은 학문정치(politics of academics)의 산물이며 넓게는 자본주의의 문화현상의 일부라고 볼 때, 오늘날 한국의 사회과학자들, 특히 주류 사회과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읽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론적인 한계보다는 정치

적 한계, 즉 주류 사회이론이 갖는 체제옹호적 성격, 비판적인 능력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합리성, 진보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실패, 사회적 불평등과 긴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위기의 징후를 짐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기업의 자본축적,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세계적 소비주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주의의 붕괴와 ‘역사의 종언’이라는 담론의 거품 속에서 사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북한과 대치, 경쟁해 온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의 완전한 승리, 한국 모델 혹은 동아시아 자본주의 모델의 승리라는 거품이 몇 배 증폭되어 나타났다.⁴⁾

뭐니뭐니 해도 지난 4~5년 동안 지식 사회를 폄하하였던 국제화, 세계화 담론에서 우리는 오늘의 지식 사회의 위기의 연원을 추적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제화, 세계화 담론은 그 출발부터가 그러하였지만 학술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조건, 즉 학문정치적 한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동안 국제화, 세계화가 우리사회에서는 구체적 현상, 사실로서의 측면보다는 국제화 전략, 세계화 전략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자본과 정보의 세계적 이동과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 지배라는 측면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고 오직 무한경쟁, 총체적 경쟁력 시대, 일류만이 살아남는 시대, 시장개방, 자율화, 국가규제 철폐 등 시장질서로의 개혁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⁵⁾ 그래서 “국제적인, 보편적인 행위준칙을 따르자”⁶⁾는 어설픈 세계 시민주의나 “서세동점의 문명의 대조류에서 이제 동세서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제화”⁷⁾라는 등 민족주의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전략’ 혹은 행위의

4) 중진자본주의론과 식민지근대화론 역시 아카데미즘의 소산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조건의 산물이고 하나의 학문정치였다고 볼 수 있다.

5) 조순, 사공일, 이현재, 좌승희 등 거의 모든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

6) 「대담: 국경없는 경쟁 ... 세계시민을 키우자」, 《서울신문》 1993년 11월 22일자 기사에서 이상우의 주장.

지향점으로서의 세계화만이 주로 관심의 초점이었다. 이 중에는 더러 한국이 현재의 조건에서 개방체제로 나아갈 경우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경고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는 잘 사는 한국이 이제 진짜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라는 측면에서 국제화, 세계화의 구호를 외쳤다.

이러한 세계화의 학문정치로서 국제화, 세계화 담론은 과거의 문명개화론, 근대화론이 그러하였듯이 민주주의적 대안에 대한 반격이었으며⁸⁾ 민주주의, 민족, 복지, 공동체 등의 가치에 대한 ‘자본’의 정치적 공세를 달리 표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구체적 현황, 기업의 축적 조건과 금융의 상황, 남북한 관계 등 이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수많은 내용은 거의 생략된 채, 오직 바람몰이식으로 세계화, 정보화론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1996년 OECD 가입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으나 당시의 신문을 눈을 씻고 보아도 이필상 교수가 국회 공청회 석상에서 성급한 개방의 위험을 지적한 것을 제외하고는 논의다운 논의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한국에서 멕시코사태 가능성 진단」과 같은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이 개방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냉정하고 강도 높게 지적한 논문이나 보고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설사 그러한 연구조사가 개인이나 정부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담론정치의 물결에서 먼지처럼 휩쓸려 갔을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국제화를 제창한 이후 60여 권의 세계화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왔고, 수백 편의 세계화 관련 논문이 쏟아져 나왔건만 세계화된 경제질서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책이나 논문은 극소수인 것도 이들 연구자들이 세계 경제와 세계 정치의 성격을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신자유주의적인 개혁과 시장주도의 정치경제질서를

7) 「국제화시대 그 의미와 우리의 대응전략」, 《경향신문》 1994년 1월 1일자 기사에서 홍일식의 주장.

8) 김동춘,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겨울호, 1994.

옹호하는 이데올로기, 정치적 거품에 지나치게 압도당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주도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세계화시대의 국가과제를 무려 53항목이나 제시하는 업적을 남기기는 했으나, 그것이 일본에서 출간되거나 싱가포르에서 출간되어도 별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이었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수많은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왔고 많은 참고할 만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것들이 휴지조각처럼 보이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적 역학이나 재벌구조, 계급관계, 남북한 관계 등 가장 예민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아픈 지점들을 제대로 건드리지 않은 채 미래의 청사진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계제패의 이론적인 표현인 세계화론, 동아시아발전론, 박정희신드롬 등 실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들은 모두가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도입, 확산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일관된 철학적·방법론적 기초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정권과 체제 옹호의 논리로는 기능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우리 민족과 민중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다. 이들은 한국 경제, 한국인의 행동, 정치와 사회 등에 대해 부당한 전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논증을 하였으며, 결론을 이끌어 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오늘날에는 계급적·정치적 노동운동보다는 국민적 조합주의와 노사타협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한국의 축적구조와 노사관계의 기본질서가 어떠한가에 대한 사실이나 전제가 생략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대안들은 노동자 및 노사문제 관련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생산적인 지침도 내려 주지 못하고 오직 진보적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명분으로만 활용되었다. 21세기론이나 정보화 담론 역시 때때로 계급지향적 노동운동을 비롯한 집합주의적인 사회운동을 비판하는 무기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담론들은 정부나 언론, 기업체 연구소의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이 유포하는 논리는 어떠한 철학적 원칙이나 일관된 이론에 기초하기보다는 권력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만 일

관되어 있다. 특히 기업체 연구소는 기관의 성격상 그것은 기업의 이윤추구외에는 어떠한 사회적·공적 책임성을 갖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시장경제를 옹호하면서 재벌체제를 고수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경쟁, 개방, 세계화의 명분하에서 19세기적인 경영구조와 기업활동의 관행을 옹호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논리는 오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축소를 요구할 경우에만 사용되었으며 재벌기업의 부당한 시장 지배를 논할 경우에는 거론되지도 않았다. 이들은 시장이라는 보편적인 잣대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의 현실경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억설을 늘어놓기도 하였고⁹⁾ ‘외채망국론은 기우’라고 주장하다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자 국민 모두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궤변을 남발하기도 하였다.¹⁰⁾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재벌기업의 대변자들이 IMF에 대항하여 민족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희극의 극치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지식인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과학 담론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지식인 사회가 오늘의 위기를 읽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냉전논리, 재벌논리가 비판적·대안적 지성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악이 되며 학문정치가 학술연구 자체를 압도하는 조건에서, 위기를 읽을 수 있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학문 사회는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3. 학문 사회 내부의 문제점

1) 범세계적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1989년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하였을 때, 사후적 설명에만 만족해 온

9) 공병호, 《동아일보》 1997년 6월 7일자 기사, 한국경제연구원,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1996, 407쪽 참조

10) 「친재벌 논객 5인방의 요설」, 《시사저널》 1998년 1월 8일자 기사.

서구의 사회과학에 대한 이와 유사한 반성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차라리 거시역사적인 관점에서 소련 사회주의의 지탱불가능성을 지적한 월러스타인(Wallerstein)이나 일찍부터 소련 전체주의 체제의 모순을 지적한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 네오맑시즘 이론가들, 이미 오래전에 완벽한 계획의 불가능성과 경제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것을 지적한 미세스(Mises)나 하이에크(Hayek) 등과 같은 자유주의자 및 극히 추상적인 체계이론(system theory)의 시각에서 소련 사회주의의 붕괴가능성을 지적한 소수의 학자들은 약간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서방의 자유주의, 맑스주의, 경험주의 이론가들은 브레즈네프 시대의 소련의 침체를 정확히 읽지 못했으며, 이데올로기적 혁신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클라우스 폰 베임(Klaus von Beyme) 교수는 서방 사회과학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주류학계의 실증주의(positivism)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¹¹⁾ 그는 자연과학이 내년의 기후를 예측하지는 못하고 오직 다음 주의 기후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과학의 모델을 원용한 서구의 주류 사회과학 역시 6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성장 붐을 타고 단기적인 정책대안 마련에만 치중하였으며 한편 좌파들은 이론적으로 자기교정 능력을 갖지 못하였고, 양자 모두는 행위자들의 의식과 행위의 측면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하벨(Havel) 같은 사람이 탁월하게 분석한 바 있지만, 80년대 소련과 동구는 사회주의의 완성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내적으로 붕괴되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식인과 중간층의 정신적 이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체제정당화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경제운영의 작동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실증주의, 과학주의, 객관주의의 정신으로 무장된 서구의 사회과학이나 동구의 맑스주의 어용학자들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인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라는 현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식과 행위의 구성물이라는 점이 이들에게는 별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

11) Klaus von Beyme, "The Collapse of Socialism and its consequences for Social Science Theory," *Law and Society*, vol.49/50, 1994.

왔던 것이다.

세계화된 경제질서하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물론 순수 경제적인 위기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 효율, 합리성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의 경제학과 사회과학이 이 효율의 이율배반(二律背反), 즉 자본축적의 딜레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증주의에 터한 시장유토피아주의는 역사인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20년대 대공황 직전에 인류가 직면하였던 시장작동의 모순, 축적의 딜레마, 국가개입의 필요성 등을 거의 망각하고 있다. 실증주의와 객관주의는 사회를 전체로 파악할 수 있는 총체적 시각과 역사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질서가 어떠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지, 그 쓰레기의 산출이 시장에 의한 부의 창출을 능가할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거의 반성적인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유토피아주의에 사로잡힌 미국의 주류 경제학과 경영학은 멕시코와 동아시아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석과 진단을 내리고, 투자를 권유하여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승리에 도취된 경험분석적 사회과학은 이제 비판의 능력, 반성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을 시장으로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학문, 과거를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학문을 완전히 뒷전으로 쫓아냈다. 이것은 범세계적인 지성의 위기, 대학의 위기, 인문사회과학의 위기를 불러왔다.¹²⁾ 이제 정치경제학 대신에 경영의 논리가, 지식 대신에 정보가, 책 대신에 TV 등 대중매체가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기 시작하였다. 지식의 흐름은 정보의 흐름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었다. 정보의 체계라는 것은 “지식이 인문적 지혜의 역사성과 깊이를 망실하고 실용성이나 환전성(換錢性)의 특색만이라도 드러진 채 요소론적으로 단위화되어 자본주의체제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대단히 신속하고 비인간적으로 생산·분배·복제되는 체제다.¹³⁾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경쟁이다, 효율이다,

12) Philip G. Altbach, “An International Academic Crisis?: The American Profess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Daedalus*, Fall 1997.

국가규제 철폐다, 1등만이 살아남는다” 하는 선전 구조가 인문사회과학이 가져야 할 비판(critique)의 능력을 빼앗았으며 19세기 계몽과 발전의 신화가 그러하였듯이 긍정(positivism)의 분위기로 우리 모두를 몰아세웠다.

발육부전의 한국 사회과학은 긍정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회과학의 담론이 이제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의 공학으로 전략하는 순간에도 그것에 대해 비판의 무기를 휘두를 힘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구조와 거시역사를 말하는 것은 죄악시하였고 오로지 과거 없는 현실과 미래만이 춤을 추었다.

2) 한국 학계의 식민성과 공리공론성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규명, 군부독재정권 이후 민주주의 심화와 발전 문제,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 등 중요한 사회과학적인 쟁점이 논의의 뒷전으로 물러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학계의 고질적인 식민성과 공리공론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식민성과 공리공론성은 상호연관되어 있지만, 물론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것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뺏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필자는 수년 전 동아시아 및 한국 경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암스덴(Amsden)이 《동아일보》의 칼럼에서 대기업이 가장 전형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한국의 대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없다는 점을 비웃는 글을 쓴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바로 대기업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회에서 한국인 학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기혹한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녀의 말대로 한국의 독특한 재벌기업에 주목을 하면서 그것을 비교경제사적인 측면에서나 순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그 효과와 한계를 정리한 경제(사)학자가 있었다면, 그는 경제학적인 인식지평을 여는 데 기여했을 것이고 동시에 한국 경제가 안

13) 김영민, 『진리, 일리, 무리: 인식에서 성숙으로』, 철학과 현실사, 1998, 35쪽.

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다 과학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 학술논문에서 읽었던 주류 경제학자들의 글들은 미국 사람이 썼더라도 그렇게 썼을 내용들뿐이었다고 본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베버(Weber)가 갈파하였듯이 시장이란 본래가 순수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정치제도이자 사회제도이다. 소비자의 행동이나 노동자의 행동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경제학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은 오직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뿐이었다. 이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의 이론이나 조합주의(corporatism)적인 계급타협론, 시민사회론과 신사회운동론 등은 87년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발전을 다루는 데 가장 자주 동원된 개념인데 그러한 개념들은 모두 소련 동구사회주의 붕괴 이후 사회변화, 군부독재 이후 정치사회변동을 다룬 미국과 유럽 학자들의 개념에서 원용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의 민주화나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가 이들의 경험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개념의 차용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87년 이후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개념과 이론 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재구성 작업이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오늘의 위기로 이르는 정치경제적 역학이나 구조-행위 자원에서의 변동의 과정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문민정권하에서 여전히 지속된 극우반공주의의 공세, 군부독재자를 대신해서 등장한 문민지도자의 권위주의 독재, 민주화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지속된 전근대적인 봉당정치, 대중들의 지역주의 투표행태나 노동자들의 기업이기주의 등 허다한 사회현상들을 오직 민주화를 향상 예외적 도정으로만 치부하면서 본격적인 탐구의 주제로 잡지 않았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 풍미한 유교자본주의론이야말로 식민성의 극치를 이룬다. 만약 그것이 과거 박정희 시대어나 전두환 정권 시대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면 정권을 변호한다

는 비난을 받았을지 모르나, 아마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 비견되는 이론적 문제제기로 서구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일본 자본주의의 성공과 동아시아 자본주의 성공에 주목을 한 미국의 학자들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고, 한국의 학자들은 그것을 역수입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유교가 얼마나 성차별을 정당화하며 가부장적 노동억압을 정당화하는 사상인지 ‘체험’하지는 못했다. ‘밖’의 눈으로 보면 성공은 아름답고 성공 이면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유교적인 가족질서, 식민지와 군사독재를 알고 있는 학자라면 결코 ‘유교’를 그렇게 쉽게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이론에서의 식민성은 정서와 문화에서의 식민성이 그러하듯이 이론에서 대세를 추종한다는 점, 자신의 눈과 관찰을 중시하기보다는 대국(大國)의 학자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를 일차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원칙보다는 표피적 현실에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5~6년 동안의 한국의 사회과학계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잘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실제의 현상과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실물경제, 실물정치, 실물사회에 대한 기초 연구가 완전히 실종되고 추상적인 언명들만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사회학의 경우 조사연구(research)가 거의 실종되었다. 농촌조사, 노동조사, 기업체 조사, 소비실태조사 등은 석·박사학위논문이나 정부연구소의 프로젝트에서 약간 다루어질 뿐 이론적 관점을 갖고 출발한 본격 연구작업으로서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다.

공리공론성은 한국의 학계가 안고 있는 최고의 병폐인데, 이는 이론의 식민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문제의 출발이 자신의 현실이 아니므로 오로지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요즘 서구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논의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조선조의 한문학을 보면 조선 땅이 무대인 작품은 홍길동전, 양반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그들은 조선 땅에 발을 디디고 있었으면서도 언제나 정신은 중국에 가 있었다. 그러니 조선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관심사안이 아니었다.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그에 관

한 기록들을 남길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고, 후세의 학자들은 추측과 상상력만으로 우리의 역사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자고로 사회의 미래를 조망하려면 나의 처지와 다른 사람이 제시한 훌륭한 생각들을 결합해야 할 터인데, 우리사회에서는 나의 처지는 생략되고 오직 남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나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곧바로 수입하여 우리도 그쪽으로 나가자는 주장들이 곧바로 등장하는 특징을 갖는다. 일전에 진덕규 교수는 일간신문에 IMF 사태에서 자신을 자책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학계의 현주소를 잘 말해 준다.

나는 ... 본질을 외면한 채 겉치장에 몰두했으며, 나다움의 가치보다는 시세에 편승해서 모방하는 일에 전념했으니 그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공부한 내용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집요하게 묻고 대답하는 실학적 연구가 아니라 한낱 외국의 이론들, 그것도 우리와 별로 연관되지 않는 것들을 무슨 대단한 학문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고답적으로 주장했으니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거품이요 허학적인 것에 불과했을 뿐이다.¹⁴⁾

물질적 자원의 제약과 정보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진보 사회과학자들은 더욱더 공리공론주의에 빠져들 위험성을 갖고 있다. 특히 경험적인 자료들은 반드시 이론에 반하는 것들로 충만되어 있으므로 맑스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경험적인 자료를 다루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90년대 자본주의 승리의 물결 속에서 완전히 주변부로 밀려나 발언권도 갖지 못한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오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연구여건과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책임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들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를 포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정부연구소나 기업연구소에서 만들어 낸 자료를 통해서만 한국 경제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맑스주의자이기 이전에

14) 《한국일보》 1998년 2월 18일자 기사.

그들 역시 한국의 오랜 공리공론주의 전통의 후계자들임에 틀림없다.

3) 대학의 부패와 기능 부재

그런데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언론에서 말하는 “그동안 학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류의 학자들의 직무유기론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재생산구조, 즉 대학과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당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연구와 학문활동이 부재한 우리의 대학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고, 또 앞으로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로 상징되는 90년대의 학문정치가 바로 대학과 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연구소나 기업, 그리고 이들 기관과 가까이 지내는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사실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회과학의 전성시대로 기록될 80년대의 논쟁도 학자나 대학의 주도로 개척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과 출판운동의 진전에 의해 가능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운동이 약체화되면서 출판시장이 축소되고 사회과학도 더불어 실종된 것이다. 대학은 과거나 현재나 이 흐름의 주변에 존재하였다. 따라서 학문적 방법론이나 원칙, 학과의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대학은 우리사회의 모든 사회과학 논쟁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민주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에서 “학문정책을 세우자”고 제창한 바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교육은 있어도 학문은 없고, 교육정책은 있어도 학문정책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듯 싶다. 그리고 교육정책 중에서도 초·중등교육 정책은 있어도 고등교육 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의 생산력 발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인문분야의 대학 및 연구와 관련된 정책은 극히 최근 들어 약간의 연구진흥을 위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에서의 대학원은 사실상 대학의 걸다리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가르쳐야 할 학문이 대부분 수입되므로 대학원은 연구의 전당이 아니라 오직 석·박사졸업장을 주는 기능밖에 하지 못

하게 된다.

우리의 대학교수집단은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나 사회에서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도전받지 않는 특권층 중의 특권층이다. 전문직업 집단인 변호사집단이나 의사집단만 하더라도 자체의 직업조직이 있어서 자정(自淨)의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의 직업윤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으로부터도, 그리고 아직 진입하지 못한 아웃사 이더(시간강사)들로부터도 도전받지 않으면서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한 때 서울대의 자연과학계 교수들이 자체평가를 제창하면서 내부의 평가체계를 세우려는 시도를 한 바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움직임에 불과하다. 대다수 대학의 대학원생이나 연구조교는 사실상 교수에게 예속되어 있으며 어떠한 비판도 제기하지 못하는 정신적 노예상태에 있다.

한국의 대학은 사실상 중병을 앓고 있다. 단지 그 구성원 누구도 그것이 중병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대학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이번의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 비리 사태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채용 시 금전수수도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대학에서는 비판이 없고 논쟁이 없다는 점이며 대학을 움직이는 논리가 학문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라는 점에 있다. 우리의 정치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사상과 입장을 세우는 것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박사과정생들이나 젊은 학자들이 선배들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주장을 내세울 리 없고, 수입한 이론의 권위에 기대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설 날이 까마득하고 그저 교수들은 ‘교사’로만 만족해야 하는 실정에 있게 된다. 본래 주장이나 이론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성격적으로 원만해지기보다는 고집이 세고, 따라서 (이론적으로) 공격적이 될 소지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대학에서 어디 강한 주장을 내세우는 학자를 터 잡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IMF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의 사회과학은 태생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교수집단은 90년대 들어서 우리사회의 기득권층의 일부로 확실히 편입되었다. 그나마 70년대까지 일부 남아 있었던 선비정신을 가진 학자들도 이제 대학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90년대 들어서 사회과학자들이 정부나 기업발주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진 것도 오늘의 지식 사회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즉 세계화담론의 거품 속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빈곤했던 것은 다분히 학자들이 덜 중요한 일(외부용역)에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겼으며, 그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학자들의 체제포섭 과정이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재벌기업과 부패한 권력은 그들의 나팔수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기업이 발주하는 외부용역은 그들이 학자들의 고상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경우보다는 다분히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90년대 들어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액수의 기업발주 프로젝트가 관련 학자들에게 쏟아졌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의 발전전망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과제의 수행과 문제제기나 토론작업은 오히려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세계화 바람을 타고 증액된 지역연구관련 연구프로젝트는 많은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외국 지역전문가로 변신시켰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한국에서 학위과정을 밟는 많은 신진 사회과학자들이 지역연구자가 되기도 했고, 지역연구는 가장 인기 있는 사회과학 분야가 되었다. 외국 연구가 분명 필요한 일이라는 하나 김영삼 정권하의 세계화 거품과 연구용역 기회의 확대는 우리사회보다 외국 지역연구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다.

어쩌면 한국의 기업이나 기업체의 경제연구소에서 대학에 몸 담고 있는 연구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기업체의 연구자들은 그래도 생생한 자료를 만지면서 기업을 위해 필요한 생산적인 성과라도 내놓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사꾼의 지식이 무능한 학자의 지식보다 훨씬 낫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이다.¹⁵⁾ 비록 이러한 주장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15) 공병호, 앞의 책, 387-423쪽.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식분자들에 대한 가장 강한 도전장임에는 틀림없다. 유신정권과 5공화국의 나팔수들은 아직 건재하고 있으며 자신은 정당했다고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을 완전히 잠재우고 탈냉전 세계화 질서 속에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이론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미국이 시장의 논리에 한국을 내맡기지 않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한 것은 역시 미국이 한국의 맹방임을 입증해 준 것”¹⁶⁾이라는 주장이 풍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4. 맺음말: 새로운 사회구성체 논쟁을 제창하며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하여 일부 방송은 80년대 영국의 대처의 개혁을 특집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한국의 언론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한지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즉 한국의 지배엘리트나 지식인들은 위기의 한국사회를 80년대 레이건이나 대처가 추진했던 방향으로 끌어 나가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야를 갖고 있다. 물론 그들의 신자유주의는 앞에서 필자가 언급하였듯이 미국 버워 거슬리지 않기의 냉전주의와 재벌옹호론과 잡탕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일관된 철학과 비전에 기초해 있지도 않다. 그러나 멕시코, 칠레 등 IMF 구제금융하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 나라들이 어떻게 일그러진 경제사회 시스템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개혁이 사회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탱가능하고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위기의 한국 속에서 사회과학은 바로 이 문제에 답을 내려 주어야 한다. 특히 진보사회과학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질서, 시장주의가 어떻게 인류의 문명을 야만상태로 몰아넣을 것인지를 분명히 비판하여 밝혀 낸 다음 그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한국사회의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일관된 철학을 가진 어떠한 정치집단, 관료

16) 김경원의 칼럼, 《중앙일보》 1997년 1월 11일자 기사.

집단, 지식인집단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가서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냉전주의, 천박한 재벌옹호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¹⁷⁾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계나 지식인집단에서 한국의 개혁과 발전의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성격과 방향을 둘러싼 사회구성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80년대의 거대담론 위주의 추상적 사회구성체론은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정치, 사회를 총체로 파악하려 했던 문제의식, 실천적 과제를 학문적인 논의와 연결하려 했던 문제의식은 발전적으로 계승될 필요가 있다. 어느 때보다도 사회과학자들의 분발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아마 남북한 긴장완화와 통일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 통일된 사회건설을 위한 논쟁이 또 한번 벌어질 것이다. 그 때 가서도 또 이러한 위기론과 책임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1세기적 통일된 한국사회 건설을 위한 방향모색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필자가 다른 지면에서 강조하였듯이 사회과학을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¹⁸⁾ 오늘의 IMF 사태는 우리 대학과 지식인 사회가 거둬 태어나 지식의 생산자로서 기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17) 김동춘, 「IMF와 한국: 강요된 세계화와 한국의 국가, 자본, 노동」, 《실천문학》 봄호, 1997 참조

18) 김동춘,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창작과 비평사, 1997.